

한국 정치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대한 서지적 고찰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Decolonization Discourse in the Political Science of Korea

이 용재(Yong-Jae Lee)*

이 철순(Chul-Soon Lee)**

〈 목 차 〉

-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 II. 연구의 전개과정

- III. 한국 정치학 분야 탈식민성 담론 개관
- IV. 한국 정치학 분야 탈식민성 담론 초록

초 록

필자들은 한국 문헌정보학과 정치학의 탈식민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한국 정치학 분야를 대상으로 탈식민성 담론에 대한 서지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치학자 중에서 한국의 정치현실에 부응하고 적실성 있는 정치학을 모색하는 학자들의 담론을 추적하고 그들의 연구물을 조록하고,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여 개관하였다. 조사대상은 해방이후 최근까지의 한국 정치학의 탈식민성 담론이다. 이러한 서지·비평연구는 한국 사회과학과 문헌정보학의 소통 가능성을 보여주고, 한국 정치학의 탈식민성 담론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제어: 탈식민성 담론, 한국적 문헌정보학, 한국적 정치학, 한국화, 자아준거적 연구, 서구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

ABSTRACT

We share the critical mind about the decolonization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LIS) and Political Science in Korea. We did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decolonization discourse in the Political Science of Korea. Concretely, we traced the decolonization discourse of the scholars of the Political Science in Korea, and wrote their abstracts. Finally, this study provided the general view of their decolonization discourse. This study covers the decolonization discourse from 1945 to 2005. This bibliographical review may show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IS and social sciences in Korea, and can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decolonization discourse in the Political Science of Korea.

Key Words: Decolonization Discourse, Koreanistic LIS, Koreanistic Political Science, Koreanization, Self-referential studies, Eurocentrism, Orientalism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lyj5384@pusan.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교수(cslee@pusan.ac.kr) (공동저자)

· 접수일: 2006년 2월 17일 · 최초심사일: 2006년 3월 8일 · 최종심사일: 2006년 3월 10일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의 사회과학자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회현실에 맞는 사회과학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 이 적지 않다. 사회과학자들은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류 사회를 위한 보편적인 이론을 추구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과학자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적설성(適實性) 있는 연구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고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시 말해, 서구 선진국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한국적인’ 사회현상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 문헌정보학의 경우, 한국 도서관의 ‘독서실화’ 문제, ‘비전문직’ 관장 문제, 곁도는 ‘주제전문사서’ 논의 등의 현상이 있고, 한국 정치학의 경우, 정책이 아닌 인물이나 연고(緣故) 중심의 정당정치, 이른바 ‘서울공화국’으로 표상되는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 한국 특유의 재벌(財閥) 현상, 우리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지방자치’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서구적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려 할 때 상당히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당연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복잡한 수식과 통계로 증명을 하는 이른바 ‘연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생긴다. 우리나라 사회과학자 중에는 이러한 연구행태에 대해 회의를 품고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적인’ 학문을 시도하거나 ‘주체적인’ 사회과학을 모색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아가 한국의 사회 현실에 적합한 사회과학을 주창하며 이러한 차원의 논의와 작업을 진행하는 사회과학자도 있다. 이러한 학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식민성(殖民性), 몰주체성(沒主體性), 부적설성(不適實性), 외국추수성(外國追隨性), 불임성(不妊性) 등의 용어로 한국 사회과학의 지적 식민성과 현실과의 괴리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하고, ‘한국적’ 사회과학을 정립하기 위해 성찰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¹⁾

필자들 중의 한 사람인 이용재는 문헌정보학자로서 한국의 도서관 현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국의 도서관현실과 한국 문헌정보학의 괴리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연구주제, 연구방법, 문제 등의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편이다. 이러한 차원의 논의는 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 분출되었으며, 이용재 또한 동대학원의 연구자모임인 ‘공동작업실’에서 다른 연구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한국 문헌정보학에서의 ‘탈식민성(脫殖民性) 담론’ 형성을 위해 공동작업을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²⁾ 또 한

- 1) 이러한 작업의 주된 사례로 학술단체협의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1988년에 창립된 학술단체협의회는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온 연합심포지엄을 통하여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을 토론함으로써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정체성과 진로에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의 제 분과학문에서 한국 사회과학의 식민성을 비판하고 ‘한국적’ 사회과학의 정립을 모색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지적 역정을 추적하고 제반 탈식민 논의를 집대성한 연구서로는『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서울: 지식산업사, 2000) 가 있다.
- 2)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이러한 작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에 대해 학문적으로 짐중 조명된 최근 사례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3)에 실린 논문들을 들 수 있다.

편 이용재는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을 주목하고, 여타 사회과학에서도 한국 문헌정보학에서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고 일종의 연대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원의 ‘공동작업실’의 문제의식을 극명히 드러낸 글을 아래에 소개한다.

우리는 그 동안 도서관 현장의 사서로서, 또는 강단의 연구자로서 활동해 오면서 행위의 지표로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서양을 그리워하며 서양을 따르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무런 의심이나 거리낌도 없이 서양을 준거의 틀로 삼았던 것이다. 말을 할 때도 그랬고 글을 쓸 때도 그랬다. 그러다 보니 우리 문제에 대한 천착과 분석은 자연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구자로서 또는 실무자로서 우리 도서관 현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말하자면 식민자(the colonizer)의 그것이었다. 우리 현장을 식민의 대상(the colonized)으로 보았다. 직접 경험을 통하여 익힌 서양, 또는 문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익힌 서양을 전달하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의 임무로 삼았다. … 한편, 이러한 고민과 작업의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학문에서 일고 있는 ‘탈식민성 담론’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느덧 타 분야에서의 흐름과 우리 자신의 작업을 동일시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학문적 연대의 가능성을 탐진하게 되었다.³⁾

필자들 중의 다른 한 사람인 이철순은 석사과정 시절부터 젊은 정치학도의 모임인 ‘한국정치연구회’에서 탈식민성 담론을 논의하면서 회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 예를 들어, 이 논문에서 탈식민성 담론 생산자의 한 사람으로 주목한 정해구와 교류하면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키워왔다.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는 현단계에서 탈식민성 담론을 이끌고 있는 김영명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탈식민성 담론을 주도하는 김명섭과도 오랜 동안 교류하면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자아준거적 정치학’을 주장하는 정윤재와도 이러한 차원의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자들의 문제의식이 발로된 결과이며, 한국 정치학 분야를 대상으로 수행된 ‘개관·경향파악(review)’을 위한 연구이다. 이렇게 학문의 경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주기적으로 (예컨대, 10년 정도의 간격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들은 이러한 개관 연구가 ‘한국적’ 사회과학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치학의 탈식민성 담론의 전개과정을 조명함으로써 ‘한국적’ 정치학을 위한 담론형성과 연구작업에 대한 서지적 고찰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문헌정보학의 전통적 초록 및 비평 활동의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작업은 문헌정보학 강단과 도서관 현장에서의 ‘주제사서(Subject Librarian)’의 위상 확립, ‘주제 서비스

3) 김정근·김영기, “한국 언론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2000. 3), pp.63-86.

(Subject Service)'의 모색에 또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다.

II. 연구의 전개과정

필자들은 이 연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듭하였다. 우선,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수년 전까지 생산한 연구물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과 소통하고자 하는 문헌정보학계의 성찰과 연구, 그리고 한국 정치현실에 대한 적실성 있는 처방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치학자들의 고민과 좌절, 그리고 그들의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연구결과물이 없었다면, 필자들의 이러한 작업도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들 사이에 토론과 합의를 거쳐 진행된 연구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탈식민성 담론의 내용과 그 범위를 정한다.

- ① 학문함에 대한 성찰과 문제제기가 표출된 경우
 - 주체적으로 지적 식민성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고민이나 작업이 있는 것
 -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 연구의 내용과 방법, 나아가 문체의 혁신을 시도하는 것
- ② 당연시되는 학문적 행태에 대해 대항담론이 대두하거나 형성된 경우
 - 비판적이거나 제3세계적 시각을 지닌 것
 -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고자 하는 관점을 지닌 것
 - 연구가 우리 사회 또는 여타 학문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

2) 주요 키워드를 설정하여 한국 정치학의 제반 분야별로 관련된 핵심문헌을 조사한다.

- ① 한국 정치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해당하는 문헌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된 키워드는 탈식민성(탈식민지화), 자아준거적 학문, 특수성과 보편성, 주체성(주체적 학문), 토착화(토착이론, 토착학문), 한국적(한국화), 질적 연구(문화기술법, 현상학적 연구, 해석학적 연구), 학술운동, 서구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 등이다.
- ② 한국 정치학의 탈식민성 담론을 각자의 입장이나 각 하위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형성한 문헌을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조사한다.

3) 핵심문헌들을 분석하여 한국 정치학의 탈식민성 담론의 기초적 유형과 특성을 파악한다.

- ① 주요 연구단체들의 동향과 전문연구지를 조사·분석한다.

- ② 주요 탈식민성 담론 생산자(Key Persons)를 집중 조명한다.
- 4) 최종 선정된 문헌을 분석하여 선정기준에 합당한가를 토론을 통하여 검토하고, 합당한 경우 초록을 작성한다.
- 5) 초록된 문헌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 최근까지의 한국 정치학의 탈식민성 담론의 맥락을 개관하는 글을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자들은 약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서로 대화와 토론을 거쳤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을 읽기도 하고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세미나,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의 기관을 방문하여 대상 문헌을 수집하였다.

토론 및 초록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주요 인물들(Key Persons)과 주요 논문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으며, 각 논문에 실린 참고문헌을 통하여 역으로 추적하면서 새로운 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학회(한국정치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등)에 몸담고 있는 정치학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해당 문헌들에 대해 추천을 받았다.

아래에서는 필자들의 작업 순서에 따르지 않고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국 정치학 분야의 탈식민성 담론 개관을 먼저 제시하여 독자가 담론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선정된 문헌의 초록을 제시하여 독자가 관심에 따라 자세히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III. 한국 정치학 분야 탈식민성 담론 개관

이 연구는 한국 사회과학의 대표적 학문 중의 하나인 정치학분야를 대상으로 그 속에서 발생하여 전개되어온 ‘탈식민담론’을 대략 살펴본다. 탈식민담론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학문의 식민성(殖民性)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정치학이 식민성에 찌들린 채 성장해 왔다고 하면 전공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듯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학이 식민, 전쟁, 이데올로기, 독재의 굴레를 지고 살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제하 일본을 통해 이식된 정치학은 관료적 국가학이나 법률학의 한 갈래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러한 풍토에서 공부한 젊은 학자들이 해방 이후 정치학 교수를 맡았다는 사실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정치학 나아가 우리 학문에 불행한 일이었다.⁴⁾ 학문보다 관(官)이

4) 이한우, 우리의 학맥과 학풍 (서울: 문예출판사, 1995), p.210.

중시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학은 이데올로기전쟁인 한국전쟁을 겪음으로써, 그 후 이데올로기 논의에 있어 치명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군사독재 시절 우리나라 정치학은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이 제공하는 ‘과학성’에 안주하여 현실정치를 비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학이 이러한 식민성에 전적으로 매몰되어온 것은 아니다. 정치학 분야의 연구활동과 그 과정에서 빛어나오는 담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구추수적(西歐追隨的) 연구 행태를 지양하고 한국 정치현실에 대한 적실성(適實性) 있는 연구를 생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때로는 한켠에서 조용하게 때로는 전면에서 강렬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우리나라 정치학의 자성적 논의를 ‘탈식민성 담론’이라고 부르고 그 지적 흐름을 추적해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제시기는 차치하고,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치학에 배태되어온 식민성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담론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정치학은 해방 이후 미군(美軍)의 진주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하는 진덕규의 지적⁵⁾처럼, 여타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치학은 지금까지 미국추수적 경향을 강하게 노정하여 왔으며 그 결과 한국의 현실을 미국의 눈으로 보아온 오류를 범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1965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길에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에 있어서의 근대화문제’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 참석했던 서독 정치학자 자이델(Bruno Seidel)은 “나는 분명히 한국사회에 와서 한국사회의 근대화문제에 관한 한국정치학자들의 논의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정치학자들이 한국문제에 관해 사용하는 개념들은 마치 나로 하여금 ‘고도의 소비사회’가 구가되고 있는 미국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정치학자 윤근식에게 말한 바 있다.⁶⁾

탈식민성 담론의 추이를 조망하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 정치학에 대해 시대별로 비판적 검토를 하고 있는 정해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그는 우리나라에서 정치학 이론이 수용되어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고 있다.⁷⁾ 제1단계는 1960년 이후 미국적 정치학 이론들이 수용되기 이전의 단계로서, 주로 일제로부터 이어져 왔던 독일 국가학적 경향, 법률적·제도적 연구경향, 라스키류의 다원적 국가론 등이 혼재해 있었다. 제2단계는 1960년대 이후부터 미국 유학자들에 의해 미국적 정치학이론들이 광범위하게 소개·수용되었던 단계로서, 행태주의, 구조기능주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근대화론 및 정치발전론 등이 수용되었다. 제3단계는 1970년대 후반부터 수용되기 시작한 종속이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비판적 이론들이 수용되는 단계로서,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5) 진덕규, “한국의 정치학을 위하여,” *한국사회연구*, 제1집(1983), p.67.

6) 윤근식, “‘사회’ 없는 정치학과 한국정치학,”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과학론: ‘사회’ 없는 사회 과학들이 어떤가?* (서울: 대왕사, 1983), pp.85-86.

7) 정해구, “한국 사회현실과 한국 정치학”, *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 준비위원회 편,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서울: 역사비평사, 1988), p.101.

조합주의 이론, 과대성장국가 이론, 네오마르크시즘 이론, 세계체제 이론 등이 수용되었다. 이와 같이 단계마다 다양한 이론들이 수용되어 왔지만, 기존의 정치학이론의 주류는 여전히 제2단계에서 수용된 미국적 정치학이론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정치학자들은 1990년대를 다원주의정치학의 시대라고 말한다.⁸⁾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거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이 늘어났으며, 이데올로기의 강요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진입한 현재는 디지털시대로서 1990년대 이후의 다원주의 정치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시대는 국민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이기도 하다. 여러 정치학자들이 세계화를 논하면서도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모색하기도 한다.

한국 정치학 분야에서 탈식민성 담론이 공론의 장에 본격적으로 대두한 때가 있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한국정치학회’는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정치학의 정립문제를 놓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비로소 우리나라 정치학의 주체성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1978년에는 “전국 30년의 한국정치학”이라는 주제였고 1979년에는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가 주제였다. 이러한 담론의 주요 발화자 중 한 사람인 윤근식은 그동안의 우리나라 정치학을 ‘사회없는 정치학’으로 규정하고, 미국추수적 연구행태로 인하여 한국사회와 유리되어있는 대다수 한국 정치학자들을 질타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정치학자들은 자아인식을 상실하고 보편주의자로서 허공을 표류하게 된다는 것이다.⁹⁾

1970년대 말 내지 1980년대 초반까지 유신체제의 수립과 광주민중항쟁의 폭력적 진압을 통한 5공 군부정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학계는 여전히 미국에서 수입한 세계관(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현실주의 국제정치관 등)과 행태주의 방법론에 기초한 정치발전론이나 정치문화론에 근거하여 한국정치를 설명하고 처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과 처방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는 크게 괴리된 것이었다. 물론 서구의 세계관과 이론을 주로 수입해서 한국정치를 분석했던 당시의 학자들도 나름대로의 이론적·방법론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서구이론에 집착하는 합리화에 지나지 않았다.¹⁰⁾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제3세계 중심의 이론적 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1960년대를 풍미했던 근대화이론에 대한 비판적 물결과 1970년대에 들어와서 눈에 크게 띠게 증가한 마르크시즘이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¹¹⁾ 우리나라 정치학을 제3세계적 시각에서 정립하고자 한 학자들 중에 빠뜨릴 수 없는 정치학자가 문승익이다.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주체있는 한국정치학’을 주창해온 문승익은 오도된 근대화론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중심지의 학문과 학문의

8) 이한우, 전개서, p.211.

9) 윤근식, 전개논문, p.86.

10) 정영태, “정치학연구의 주요 쟁점과 그 연구현황”,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현대한국인문사회과학연구사: 80·90년대 비판학문의 평가와 전망 (서울: 한울, 1994), p.10.

11) 최완규, “한국정치학의 연구동향”, 사회과학연구(경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창간호(1989), p.15.

보편성을 혼동하는 ‘변방학자의 허위의식’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¹²⁾

진덕규는 1983년에 한국 정치학의 정립을 위한 대표적이고 심도있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학을 위하여”라는 논문¹³⁾이다. 진덕규는 이 논문에서 한국 정치현실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한국의 정치학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학이 한국 현대정치를 연구함에 있어 1차자료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적실한 현실분석틀 조차 결핍한 채, 야사(野史)와 풍문(風聞)을 전달하거나 서구의 낯선 용어와 개념의 풀이에 매몰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학의 이러한 몰주체성(沒主體性)에 대한 원인으로 첫째, 한국 정치학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의 편향 둘째, 한국사회의 전통과 가치를 애써 단절하고자 한 한국 정치학의 계몽주의적 성격 셋째, 서구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몰역사적 이해와 그것의 한국사회에의 도식적 대입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이홍구는 한국정치학회가 처음으로 시도한 ‘회장취임연설’을 통하여 한국 정치학이 안고 있는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¹⁴⁾ 그는 우리나라 정치학이 서구 정치학을 수입함에 있어서 서양정치제도 및 현상의 이면에 깔린 서양적 인식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무분별한 서구이론의 수입은 맹목적 서구추수주의를 야기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서구의 이론에 대한 도입 자체를 배격하는 지적 국수주의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학의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적 정치의식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찾는 작업을 제시하였다.

최장집은 “한국정치학의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논문¹⁵⁾에서 미국식의 행태주의, 기능주의, 실증주의, 경험주의 그리고 다원주의가 우리나라 정치학 연구의 방법론적 입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학문적 화두로 삼아온 최장집은 한국 정치학의 미국편향성을 지양하는 방편으로, 관료적 권위주의 · 그람시의 해계모니론 · 네오마르크시즘 등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그 이론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국정치를 읽어내려고 애를 써왔다. 그와 같은 노력이 『한국의 국가와 노동운동』(1988) ·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1989) · 『한국민주주의의 이론』(1993) 등과 같은 저서들에 담겨있다.

한편 198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제3세대학자군’에 의해 일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 치열하게 타오른 ‘학술운동’은 마르크시즘의 과감한 수용, 민족적 · 민중적 · 변혁적 시각의 중시, 지배이

12) 문승익, “종속이론이란 무엇인가?”, 윤근식 편, 현대정치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서울: 법문사, 1980), p.85; 문승익은 ‘자아준거적 한국정치이론’을 주창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적인 정치학의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작업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책에 소개되어 있다. 문승익, 자아준거적 정치학의 모색(서울: 오름, 1999).

13) 진덕규, 전개논문, pp.65-88.

14) 이홍구, “근대한국정치학의 백년: 그 한계성의 극복을 위한 자성,” 한국정치학회보, 제20집, 제2호(1986), pp.8-10.

15) 최장집, “한국정치학의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 현상과 인식(한국인문사회과학원), 제11권, 제1호(1987), pp.134-146.

데올로기에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지형’의 창출 등을 강조하고 있다. 1988년 6월 “80년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개 학술단체가 연합하여 주최한 심포지움은 진보적 학술연구와 운동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학 분야는 ‘한국정치연구회’가 참여했고, 정해구가 “한국사회현실과 한국정치학의 새로운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¹⁶⁾ 정해구는 이 글에서 기존 한국 정치학의 주류폐려다임을 형성해온 미국적 정치학이론은 한국의 정치현실에 대한 연역적 원리가 되어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정치현실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학의 불임(不姪)상태’를 야기하여 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위의 단체들은 같은 해 11월에 학술단체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그 뒤 1998년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1990년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합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처럼 한국 정치학에서의 탈식민담론의 공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학의 문헌에서 토착화, 한국화, 자아준거적 정치학, 탈식민성, 서구(미국)추수성 극복, 현실적합성 등의 용어가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해방 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한국 정치학의 정립은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실천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학은 적합성의 위기라고 부를 만큼 한국사회가 처해 있는 정치현실과 유리되어 왔다. 한마디로 정치학의 이론을 공부하면 할수록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처방을 내리는 데 불리하다는 비판이 일어왔으며, 그 비판의 강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정치학은 정치상황이 주는 제약 때문에 이데올로기 문제를 경시 또는 외면하거나 항상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양상을 나타내왔다. 진덕규, 윤근식 등과 같은 탈식민담론의 주요 형성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있는 한국 정치학을 주창해왔으나, 그러한 담론을 실제로 현실정치에 적용한 구체적인 연구성과는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1980년대 이후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종속이론, 국가이론, 마르크시즘 및 네오마르크시즘 등 비판적 사회과학 모델의 수용 및 적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그 동안의 미국 정치학 일변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들 모델을 성급히 도입하려는 의욕에 넘친 나머지, 그 이론들에 대한 원산지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을 비롯한 여과작업을 소홀히 한 면이 있다.

이상의 탈식민성 담론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1980년대 이후 이른바 ‘제3세대 학자군’이라고 불리는 젊은 연구자들의 ‘진보적’ 학술운동에서 희망의 싹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정치학 분야는 1986년 6월 항쟁 직후인 8월에 창립된 ‘한국정치연구회’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소장 연구자들만이 탈식민담론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치학회에서 이루어진 반성적 움직임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 정치학은 그 주류에 있어서도 이미 상

16) 정해구, 전개논문, pp.100-109.

당한 탈식민담론을 형성해왔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1990년 이후의 한국 정치학에서의 주요 탈식민성 담론 형성자들을 살펴보고 이상의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각자의 분야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는가를 알아본다.

1990년대 이래 최근까지의 정치학의 탈식민성 담론의 특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정치학이 미국 정치학의 압도적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정인은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은 연구주제의 선정, 방법론상의 선택, 문헌의 참조에 있어서 전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왔음”을 강조하고 있고,¹⁷⁾ 이정복¹⁸⁾과 김석근¹⁹⁾도 한국정치학이 여전히 미국정치학 이론의 수입상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영태는 “한국정치학의 미국 편향성과 한국 정치”라는 논문에서 한국 정치학의 대미종속성이 심화되다 보니 ‘미국 정치학에 대한 종속 → 독자성 결여 → 종속’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²⁰⁾

둘째, 많은 논자들이 여전히 당위적 차원에서 한국적 정치학의 정체성 확립을 논하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글도 눈에 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두드러진 사람은 김영명이다. 그는 “한글 사회과학을 세우자”라는 논문에서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사회과학을 하는 초보단계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말글로 우리 개념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우리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¹⁾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신선한 것으로 한국 정치학자들의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정윤재는 비록 외국학자의 견해이지만 한국정치사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동태적인 연구방법의 하나로 “문제해결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²²⁾ 배병삼의 논의도 신선하다. 그는 한국 정치학의 전통적 맥락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치학의 기원을 한국 전통사회에서 추적한다. 그는 다산 정약용에게서 정치사상학의 기원을, 연암 박지원에게서 국제정치학의 기원을, 혜강 최한기에게서 비교정치학의 기원을 찾고 있다. 또한 한국 정치학이 확보해야 할 정체성을 전통사회의 ‘덕치(德治)’와 ‘경청(傾聽)’에서 찾고 있다.²³⁾ 배병삼은 고전과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이러한 개념을 발굴하여 조명한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한국적 전통에서 한국정치학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배병삼의 주장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7) 강정인, “서구중심주의의 폐해: 학문적 폐해를 중심으로,”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서울: 아카넷, 2004), p.416.

18) 이정복, “한국정치학의 변화와 발전방향,” *한국정치연구*, 8·9호 합병호(1999), pp.549-567.

19) 김석근, “주변부 지식인의 ‘허위의식’과 ‘자기정체성’: ‘한국정치사상’을 위한 마지막 진술,” *한국의 정치학: 현황과 전망* (서울: 법문사, 1997), pp.104-145.

20) 정영태, “한국정치학의 미국편향성과 한국 정치,”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우리 학문 속의 미국*(서울: 한울, 2003), p.158.

21) 김영명, “한글 사회과학을 세우자,”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2호(2000, 여름), pp.189-208.

22) 정윤재, “‘자아준거적 정치학’과 한국정치사상연구: 문제해결적 접근의 탐색,” *한국정치사상의 비교연구*(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pp.3-38.

23) 배병삼, “한국 정치학의 기원과 정체성 탐색,”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2호(2003), pp.87-105.

셋째, 한국적 정치학의 수립을 위해 한글이라는 언어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김영명도 그러하지만 국제정치학자인 김명섭도 한글 문제를 논하고 있다. 그는 한글로 된 한국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한글로 된 세계에 관한 연구의 축적이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²⁴⁾

넷째, 세계화의 시대이기도 한 이 시기에 ‘한국적 국제정치학’ 정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 졌다는 점이다. 김명섭, 전재성 · 박건영, 김영명²⁵⁾의 논의가 그러한 것들이다. 특히 전재성과 박건영은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외교사와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⁶⁾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 볼 때 한국 정치학의 탈식민성 담론은 이전에 비해 미약하나마 때로는 각자의 분야에서 때로는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성격의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방 이후 최근까지 한국 정치학에서의 탈식민성 담론이 파란만장하게 전개되어온 과정을 조명한 결과, 주요한 탈식민성 담론 생산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글쓰기까지 고민하고 다양한 실험을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담론의 물결이 기저를 이루어 앞으로의 방향은 당위성 차원의 담론에서 벗어나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IV. 한국 정치학 분야 탈식민성 담론 초록

구범모, “비교정치학 20년의 반성”
『한국정치학회보』 제2집(1967), pp.7-28.

글쓴이는 이 글에서 해방 이후 20년 간의 한국 정치학이 우리나라의 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다루기 위한 주체적 계기를 갖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한국의 정치학은 한국 민중 속에 약동하는 정치의식을 인식하고 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주체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한국의 정치학도는 오랜 동안 우리의 정치이념과 제도를 정립하고 분석하기 위해 외국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도입된 제도와 토착화하지 못한 정치이념을 해설하는 계몽적 역할만을 수행했다. 둘째, 정치학의 고유한 사회적 사명은 권력비판인데, 국내의 정치적 제약으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전국 초기 한국의 정치적 지배층은 자신들에

24) 김명섭, “제국정치학과 국제정치학: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위한 모색”, *세계정치연구*, 제1권, 제1호(2001), pp.3-38.

25) 김영명, “우리 정치학 실천의 방안: 문제와 국제정치학의 예”, *정신문화연구*, 제26권, 제1호(2003 봄), pp.3-23.

26) 전재성 · 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42집, 제4호(2002), pp.7-26.

게 영합하고 도움이 되는 의견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지배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권력비판적인 정치학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셋째, 정치학자들이 저술과 연구활동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른바 아카데믹한 입각점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학의 아카데미즘의 역설은, 늘 안전한 곳에서 자기 현실을 남의 현실처럼 방관하고 남의 현실을 자기 현실처럼 착각하는 오류 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비교정치에 관한 활발한 번역활동을 통해 한국의 비교정치학자들이 느낀 방법론적 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문헌과의 접촉에서건, 자발적인 동기에서건 비교정치 분야에 후진국 연구는 불가결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종래의 구미정치를 연구하는 방법이 형식적 기술에 그치고, 정치조직이나 운영을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만 파악했지 그 조직을 움직이는 정치과정의 탐구를 등한시하였다는 반성에서 인간행태, 소집단의 연구를 통해 정치의 동태적 측면을 파악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구미정부나 후진국 정부를 각각 그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적 틀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 인접과학과 협조하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점차 갖게 되었다.

문승익, “자아준거적 정치학: 그 모색을 위한 제언”

《국제정치논총》 제13 · 14집(1975), pp.111-118.

글쓴이는 이 글에서 “왜 우리나라 정치학자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치학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해 치밀한 논리를 전개한다. 글쓴이는 특히 ‘필요’라는 용어에 대해 무게를 두어 설명한다. 즉, 학문에는 국경이 없고 또 가치에도 국경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에는 국경이 존재하며, 또 여러 가지 필요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도 국경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미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과 내용이 반드시 같을 수 없다고 한다.

글쓴이는 위와 같은 자신의 논의를 ‘학문에는 국경이 있지만, 학자에게는 국경이 있다’는 명제로 제시한다. 나아가 글쓴이는 ‘자아준거적(自我準據的) 학문’을 주창한다. 즉 학자들은 학문을 하되,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갖는 여러 가지 필요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필요의 만족을 염두에 두고 학문적 문제와 과제를 선정하고, 그러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그 학문을 ‘자아준거적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글쓴이는 강조한다.

이어 글쓴이는 ‘자아준거적 정치학’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치현상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되 우리 사회가 갖는 제반 필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식을 추구할 때, 둘째, 연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제와 이에 대한 자료를 선정 선택하는 데서 우리 사회가 갖는 제반 필요를 그러한 연구과제 및 자료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셋째, 정치현상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연구활동에서 우리 사회가 갖는 제반 필요의 만족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삼을 때, 이상 세 가지다.

또한 글쓴이는 이러한 ‘자아준거적 정치학’의 근거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정치학자들의 사회적 위치다. 즉 우리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할 때 정치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치학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상당히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독창성이다. 우리가 자아준거적이 됨으로써, 즉 우리들 필요 만족에 충실히 것으로써 우리가 갖는 독창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한다는 것이다. 셋째, 합리성이다. 여기서 합리성이란 주어진 지적 물질적 자원의 가장 경제적인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우리들 필요 만족에 준거하여 우리의 자원을 관리할 때 자원의 낭비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필요’와 ‘자아준거적’이라는 개념들을 내세우며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는 이 글은 우리나라 정치학의 탈식민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우리 정치학’ 건설을 위한 담론이 결코 보수적이거나 국수적 논리가 아님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유회로서의 학문’이 아닌 ‘가장 한국적인 동시에 가장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학문’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인 것이다.

이상우,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립을 위하여: 소망스러운 발전방향과 과제의 확인”
《한국정치학회보》 제12집(1978), pp.137-148.

글쓴이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정치학 연구가 외형적으로는 성장해 왔지만 그 내용에서는 서구추구적 연구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삼고, 한국 국제정치학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인용의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글이 써어진 시점까지의 한국 국제정치학사 30년을 말한다. 즉, 외국 선진학문이 수용되고 보급된 시대이다. 글쓴이는 1980년을 고비로 한국 국제정치학계도 강대국 시각이 아닌 약소국 시각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등 ‘인용의 시대’에서 ‘창의의 시대’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우리 국제정치학계의 창의성이 어떠한 각도에서 발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첫째, 시각의 문제다. 글쓴이는 그 동안 강대국 입장에서 내려다보던 국제정치학을 약소국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시각으로 보완하자고 말한다. 둘째, 특수 연구요소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을 강조한다. 즉, 학문은 시대적 지역적 연구의 산물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방법론의 영역이다.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안보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특유한 연구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제 우리 국제정치학계가 한국의 국제정치 대처방안에 적실한 해법을 줄 수 있는 학문

적 축적을 하기 위해 ‘시각의 미국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고 창의의 시대를 열자고 하면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정치학의 탈식민화를 위한 기초 논의를 생산하고 있다.

진덕규, “한국의 정치학을 위하여”
『한국사회연구』 제1집(1983), pp.65-88.

진덕규는 이 논문에서 한국 정치현실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한국의 정치학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하고 있다. 글쓴이는 한국정치학이 한국 현대정치를 연구함에 있어 1차자료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적실한 현실분석틀 조차 결핍한 채, 야사(野史)와 풍문(風聞)을 전달하거나 서구의 낯선 용어와 개념의 풀이에 매몰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글쓴이는 해방 이후 미군의 진주와 함께 시작된 한국정치학이 미국정치학의 압도적 영향 아래 그것의 도입과 소개에 치중해 왔으며, 심지어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정치를 바라보는 중대한 오류를 범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정치학의 이러한 몰주체성(沒主體性)에 대한 원인을 상술한다면, ① 한국정치학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편향 ② 한국사회의 전통과 가치를 애써 단절하고자 한 한국정치학의 계몽주의적 성격 ③ 서구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몰역사적 이해와 그것의 한국사회에의 도식적 대입 등을 들 수 있다.

전환기에 놓인 한국정치학을 위해 이 논문은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학의 방법론을 다원화시킨다. 둘째,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설명하는 정치학이론의 모색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정치를 역사적인 면, 이데올로기적인 면, 과정적인 면 등에서 논구하는 작업을 전개하여 한국정치학의 연구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해방 후 4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정치학의 한켠에서 일구어져온 한국정치학의 식민성 극복을 위한 담론을 집약적으로 노정하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정치학은 그동안 알게모르게 추수(追隨)해온 미국정치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 정치현상에 대한 적실하고 주체적인 연구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이 글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윤근식, “‘社會’없는 政治學과 韓國政治學”
『한국사회과학론: ‘사회’없는 사회과학들이 어떤가?』. 대왕사, 1983, pp.85-112.

윤근식은 이 글에서 한국정치학이 그 전제에서부터 사회와 관련하여 정치를 바라보는 ‘전체사회적 정치분석’을 포기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정치학에 있어서의 ‘국가와 사회의 분리현상’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글쓴이는 한국사회와 유리된 채, 정신적으로 서구(특히 미국)에 이민간 한국 정치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꼬집고 있다. 즉 한국 정치학자들은 ‘과학’이라는 간판으로 서구의 정치이론을 보편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다룬다고 하면서도 인식태도에 있어서는 한국사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그런 뜻에서 이들이 자아인식을 상실하고 보편주의자로서 허공을 표류하게 된다고 신랄한 풍자를 하고 있다.

한국정치학은 그 출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기존 권력관계’를 정당화하고 안정화하는 기능을 지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소의 냉전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양극화가 사회민주주의의 사회비판적 기능을 앗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이후 한국정치학에서 그 지배적 위치를 점해온 다원론적 국가론·정치과학·행태주의 등의 개념들은 ‘기존체제 안의’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규범에 대한 연구에는 적극 활용된 반면, 한국사회의 ‘구체적 역사성’을 분석하는 데는 본질적으로 등한시되거나 배제되었다.

글쓴이에 의하면 1948년 이래 한국정치학은 ‘국가와 사회’ 또는 ‘정치와 경제’의 이론적 분리를 지양(止揚)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이 분리현상의 통합이 한국정치학의 토착화에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기존체제의 긍정 위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자체를 문제삼는 전제사회과정의 조정으로부터 나옴을 글쓴이는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최장집, “한국 정치학의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

《현상과 인식》 제11권, 제1호(1987. 봄), pp.134-146.

이 글은 학술계간지 《현상과 인식》이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내진 ‘우리나라 학문에 대한 반성과 전망’이라는 큰 주제에 맞추어 글쓴이가 정치학 분야를 맡아 쓴 것이다.

글쓴이는 미국 정치학이 한국 정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고 보고 이에 따라 나타난 한국 정치학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사회갈등이나 계급갈등 그리고 변혁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 합의와 평화적이고 진화론적인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다. 둘째, 국가행위 국가역할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인식한다. 셋째, 미국 정치학의 무비판적 수용은 한국정치에 대한 비역사적 접근으로 나타난다.

글쓴이는 주체적인 한국 정치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철학적인 문제의 중요성이 다.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대화와 교류가 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철학적 쟁점이 사회과학의 주제 내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역사성의 문제다. 역사의식 또는 역사적 시각이 사회과학의 문제를 내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 주체의 문제다. 한국정치학은 우리 정치현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절박한 문제를 다루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한국 정치학자는 역사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지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구, “한국 사회현실과 한국 정치학”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1989, pp.100-112.

정해구는 이 글에서 미국추수적인 한국정치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사회의 현실과 변혁이 요구하는 정치학의 과제를 확인하고, 나아가 한국의 정치지형에 맞는 새로운 정치학의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진보적 학문연구’를 표방하고 출현한 10개 학술단체가 1988년 6월에 개최한 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으로, 기존 사회과학계의 ‘수입상적’ 연구행태에 정문일침을 가하고 ‘민족적·민중적’ 학문을 주창하는 입장에서 서술되었다.

미국국적(美國國籍)의 한국정치학에 있어서, 한국사회는 자기모순을 지양하는 ‘실체’가 아니라 지식적용의 ‘대상’으로 나타나며, 한국정치학자들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지양하고자 하는 ‘주체’가 아니라 ‘선진지식의 계몽자 또는 전달자’로서 나타난다. 기존 한국정치학의 주류파러다임을 형성해온 미국적 정치학이론은 한국의 정치현실에 대한 연역적 원리가 되어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현실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정치학의 불임(不姪) 상태’를 야기하였다.

이 글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 복무하기 위한 한국정치학의 과제로 첫째, 사회구성체의 상부구조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 둘째, 정치적 수준으로 수렴되는 민족적·계급적 갈등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밝히는 것을 들고 있다. 나아가 이 글은 한국정치학의 방법론적 대안 모색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현실에 바탕하는 정치학이론의 건설’이 그 전제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정치학이 한국의 정치현실을 보다 적실성있게 설명하고 생산성있는 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편향적 연구행태를 벗어던지고 한국 정치문화의 민족적·이데올로기적·계급적 특수성에 주목하며 인간해방과 역사발전의 과정에서 한국현실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임무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이 글은 역설한다.

정영태, “정치학연구의 주요 쟁점과 그 연구현황”
『현대한국인문사회과학연구사: 80·90년대 비판학문의 평가와 전망』. 한울, 1994, pp.9-41.

정영태는 이 글에서 1980년대 이후 ‘진보적’ 학술운동이 정치학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방법론을 포함한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진보적 정치학의 논의구도를 짚어보고 있다.

1980년을 전후하여 이 땅에는 유신체제와 5공 군부정권과 같은 폭압적인 권위주의 체제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학계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세계관(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현실주의국제정치관)과 행태주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한국정치 현상을 설명하고 그 처방을 내리는 식의 연구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현실과 이론의 괴리는 심화되었다.

이에 비판적 내지 ‘진보적’ 사회과학자들은 기존이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론, 과대성장국가론, 자본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론, 종속이론과 네오맑스주의 이론 등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들도 한국정치 현실을 진단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합의가 ‘진보적’ 정치학자들 사이에 이루어지자, 1980년대 말에는 정통맑스주의 또는 정치 경제학적 방법론이 한국정치 현실을 설명하는 데 한몫을 하였다. 이러한 진보적 정치학이론과 방법론의 등장은 한국정치학의 다원화, 질적 심화, 그리고 토착화를 촉진시키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움직임에도 문제점은 없지 않다.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의 경우, 현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모두 가치관의 차이로 환원시킨다거나, 경제결정론에 집착한 나머지 정치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당파성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현실정치에서의 대립을 학문적 논의과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해왔다. 또한 글쓴이는 한국 정치학계에서 수입 이론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 한국정치학의 토착화에 있어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이론을 수입할 때는 그 이론을 탄생시키고 설득력있게 만든 ‘원산지’의 상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글쓴이는 학계에서 새 것을 수용할 때 흔히 보여온 경박성, 즉 그 이전까지의 이론이나 세계관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태도에 대해 학자들의 ‘현실관련적’ 학문자세는 현실성과 동시에 계속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문일침을 놓고 있다.

김석근, “주변주 지식인의 ‘허위의식’과 ‘자기정체성’: ‘한국정치사상’을 위한 마지막 진술”

『한국의 정치학: 현황과 전망』. 법문사, 1997, pp.104-145.

글쓴이는 이 글에서 ‘한국정치사상’의 존재와 그 위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한국정치사상’ 분야 나아가서 한국정치학이 가진 문제의 일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글쓴이는 한국정치학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한국정치사상 분야로 나아간다.

글쓴이는 한국 정치학의 가장 큰 문제로 ‘학문과 그 현실적 대상과의 분열’ 혹은 ‘이론과 현실 사이의 격심한 괴리현상’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그리고 사물과 세상을 보고, 자신의 솔직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한국의 정치학’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정치사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정치사상’ 분야의 연구 성과와 현황은 과연 어떠한가? 글쓴이에 따르면 한마디로 만족스러운 상황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우선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한국정치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으며 한국정치사상 분야의 교수 충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다 상황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직도 ‘제국

주의 최고 발전단계로서의 학문의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국주의는 단순한 지식 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시각·사고방식 등을 지배하기 때문에 '주체적인 사고'는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글쓴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변부의 고착성과 변혁 성이라는 양면성 가운데 변혁성에 주목하여 지적인 '혁명'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쓴이는 이러한 지적인 '혁명'을 전망하는 입장에서 '한국정치사상'에 대해 좀더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정복, "한국정치학의 변화와 발전방향"

《한국정치연구》 제8·9호 합병호(1999), pp.549-567.

글쓴이는 이 글에서 한국정치학의 변화를 세대별 학자들이 가르친 정치학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적한 다음 한국정치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가 진단하는 한국정치학의 문제는 주체적인 기반의 결여이다. 글쓴이는 한국정치학이 지난 반세기 동안 주체적인 발전을 하지 못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정치학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 해방과 더불어 갑자기 시작된 정치학이 외국에 의존해 발전해 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오랜 기간에 걸친 권위주의적 통치는 정치학의 주체적 발전에 알맞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시기의 정치학은 한국정치를 정직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첫째, 둘째 이유로 주체적인 정치학이 발전하지 못했다면 가장 후진적인 분야는 한국정치분야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정치학의 경우 미국정치론이 가장 발전된 분야라는 사실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넷째로 한국정치학의 불균형 상태도 한국정치학의 주체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사상, 주요 외국의 정치, 국제정치 등의 분야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정치학은 미국정치학과는 달리 인접학문분야의 연구경향과 입지를 흡수하기는커녕 그 분야가 점점 협소해지고 있고 정치학 내부에는 해체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쓴이는 끝으로 한국정치학은 외래 이론을 한국정치현실에 덮어씌우기보다는 현실의 이해와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한에 있어 외래 이론을 이용해야 하며 한국 정치학자들은 한국현실과 외래 이론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한국정치이론을 수립하고 한국정치이론을 가지고 정치현실을 볼 수 있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정치학의 발전방향은 복지민주국가의 수립, 통일국가, 자주국가의 수립, 자립적 개인의 확립이라는 근대의 목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윤재, "자아준거적 정치학'과 한국정치사상연구: 문제해결적 접근의 탐색"

『한국정치사상의 비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pp.3-38.

글쓴이는 이 글에서 해방 이후 한국정치학계는 주대 있는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한국정치를 연구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한국정치사상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관심도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질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치사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동태적인 연구방법의 하나로 "문제해결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정치를 단순한 생물학적 행태(behavior)가 아니라 의지와 가치선택, 공동체적 성취목표를 포함하는 행동(action)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를 이렇게 이해해야만 한국정치사와 정치사상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 동시에 건강한 민족적 에너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문제해결적 접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가 보기에 이러한 연구방법은 첫째 한국정치사상을 각 시대마다 민족과 국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 등을 고려하는 프락시스적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하는데 유용하다. 둘째, 이 방법은 교의사적 연구에 대비되는 관념사적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보다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한국정치학에 초래된 학문적 비자주성, "정치의 철학에 의한 정복",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한국정치에 대한 초사실적 일반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영명, "한글 사회과학을 세우자"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2호(2000. 여름), pp.189-208.

글쓴이는 이 글에서 한국 사회학이 미국 사회학의 종속에서 탈피하는 방안으로 우리말과 우리 글로 학문할 것을 제안한다. 이 문제는 학문의 언어를 바꾸는 습관의 문제이지만 이것이 잘 시도되지 않는 이유는 힘센 나라의 언어가 우리 언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지배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우리 학문'의 목표이며 따라서 이 목표는 언어와 학문의 독자성뿐 아니라 정치와 권력의 독자성도 목표로 한다.

글쓴이가 말하는 우리 학문은 우리 삶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말과 글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삶이란 주로 우리가 당면한 삶의 '특수성'을 말하며 우리 눈이란 자신의 삶이나 남의 삶을 볼 때 자기의 삶과 자기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삶을 우리 눈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곧 한국의 특수성을 살리는 학문을 한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 학문이 지향하는 한글 사회과학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첫째, 되도록 외국 말이나 글자를 쓰지 않고 우리말과 글로 사회과학을 하는 초보단계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말글로 우리 개념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우리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론이나 사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어 폐권주의 정책과 이를 부추기는 국내 사대주의자에 저항해야 한다. 즉 언어 제국주의에 저항해야 한다. 셋째, 되도록 우리말을 만들고 외국 말을 우리말로 옮겨 한글로 적는 것이다. 넷째, 한글 사회과학은 문화 독자성뿐 아니라 지식과 정치의 민주화도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대국의 말을 선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도의 정치 문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글쓰기를 할 때 ‘사대주의 무의식’을 극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학문 개념을 채택할 때 한자말과 토박이 말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토박이말을 우선 써야 한다. 외국 말과 한자말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한자말을 우선 써야 한다.

김명섭, “제국정치학과 국제정치학: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위한 모색”

『세계정치연구』 제1권, 제1호(2001), pp.3-38.

이 글은 한국 국제정치학의 형성과정과 향후의 발전방향을 제국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글쓴이는 먼저 제국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의 개념적 구별을 시도한다. 제국정치학은 특정국가가 자국적 표준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와 인식구조를 동심원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제국정치학은 폐권적 표준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계를 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국내정치학과 국제정치학 사이의 구별이 모호해 지며, 지리적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학이 주요 구성부분이 된다. 제국정치학의 역사적 발전은 제국주의 정복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제정치학은 각 국가의 개별적 표준에 대한 상호인정을 전제로 국경을 가로질러 발생하는 모든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체계이다. 국제정치학의 기반은 민족국가가 서로를 국제정치 활동무대의 실체로서 인정하는 베스트팔리아체제이다.

글쓴이가 제기하는 문제는 미국 중심적 제국정치학의 영향 하에서 어떻게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먼저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미국적 ‘확장’을 위해 복무하는 제국정치학의 인식 틀에 함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적 국제정치학’은 자기(selfness)와 타자(otherness)를 올바로 구별하는 데서 출발하여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국제정치학에서 자기와 타자의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인식의 주체가 기반하고 있는 역사적, 사상적 토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없이는 자국의 문제와 타국의 문제가 혼재된 제국정치학의 인식 틀에 함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자기와 타자를 구별해서 인식하기 위해 기능적 주제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 국제정치

학이 인문학적인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정립을 위해 글쓴이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문제이다. 글 쓴이는 세계적 공용어인 영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글을 주된 언어로 삼는 국제정치학적 지식구조의 심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글로 된 한국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한글로 된 세계에 관한 연구의 축적이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한국적 국제정치학이라는 목표가 자칫 한국 중심적 제국정치학의 수립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같은 목표의 혼동은 과거 제국정치학이 범했던 오류를 되풀이 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적 국제정치학은 자국 중심적 인식 틀에 함몰되어 오히려 보편적 진실의 추구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는 과거의 일본적 제국정치학, 미국적 제국정치학을 극복하고 대안의 학문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재성 · 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42집, 제4호(2002), pp.7-26.

이 글은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이 존재할 수 있는가, 존재해야 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글쓴이들이 말하는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이란 한국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예측하여 실천의 길잡이가 되는 지식임과 동시에, 국제관계이론계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제관계의 장에서 한국이론가들의 위상을 정립하는 정치적 도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답을 얻기 위해 글쓴이들은 먼저 국제관계이론의 구성을 우선 살펴본다. 다음으로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의 규범적 측면을 살펴본다. 글쓴이들은 국제관계이론의 규범적 측면을 한국적 입장에서 재고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한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국제정치에 대한 규범적 입장을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어서 한국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보편적인 세계정치의 규범 형성에 공헌할 수 있는 한국적 국제관계 규범이론을 만드는 접근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정확하고 폭넓은 국제관계 설명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둘째, 한국외교사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국의 역사에서 나타난 현재에 적용가능한 규범들을 살펴보는 방법이 된다.

글쓴이들은 이어서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의 설명적 측면을 살펴본다. 글쓴이들은 한국적 국제관계 설명이론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한국 입장에서의 규범적, 가치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을 설명하는 이론이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역사에서 도출된 이론이어야 한다. 넷째,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을 만들기 위해 글쓴이들이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관계의 실제 혹은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역사(특히 외교사)와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 가져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김웅진, “과학적 패권과 연구방법론: ‘우리 방법론’의 모색”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2권, 제1호(2002), pp.217-229.

글쓴이는 이 글에서 방법론적 구미 종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우리 방법론’을 모색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 방법론’이란 우리말로 구성되어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고유한 연구문제, 분석논리와 시각을 담은 연구방법론을 지칭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우리 정치학 연구의 방법론적 구미 종속성은 연구방법론의 ‘과학적 보편성’을 근거로 정당화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 시각을 반영하는 ‘우리 방법론’의 모색은 과학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한다.

그러나 글쓴이에 따르면 연구방법론의 과학적 보편성은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체계의 형성과정에 대한 과학철학적·지식사회학적 입장에서 볼 때, 연구방법론의 과학적 보편성은 강압적 합의, 즉 ‘과학정치(politics of science)’의 전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표출되는 패권의 소산, 즉 계서적·억압적인 방법론적 네트워크의 작동에 따른 허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연구방법론의 적실성은 특히 성숙하지 못한 과학체계 속에서 더욱 순쉽게 조작될 수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독자적 분석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던 우리 정치학계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구미지향성에 의해 ‘정치적으로 품질이 보장’된 구미의 분석시각과 연구방법론은 일종의 신화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탈과학적·이념적 서구지향성에 의해 가속화된 구미 방법론의 신성화는 연구문제의 구미 종속성을 야기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우리의 고유 이미지와 유리된 지식을 생신해 왔다. 따라서 그 적실성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글쓴이는 자아준거적 정치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사회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이미지의 탐색이 요구되며, 이러한 탐색이야말로 ‘우리 방법론’ - 연구문제의 전환을 통해서 독자적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기제 - 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김영명, “우리 정치학 실천의 방안: 문제와 국제정치학의 예”

《정신문화연구》 제26권, 제1호(2003. 봄), pp.3-23.

글쓴이는 이 글에서 먼저 우리 정치학에 대한 모색은 주로 서양 종속성에 대한 지적과 문제 제기

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진단한다. 이어서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해석해 보고 우리 정치학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국제정치학을 예로 들어 제시하려고 한다.

이 글은 우리 정치학의 서양 종속성에 대한 선구적인 정치학자들의 논의가 실천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선언적인 결론에 머무르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째, 기존 정치학의 폐권적 지배가 너무 커서 학자들이 ‘범법 과학’을 추구하는 이단아가 되는 것 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학문의 틀이 너무 완강하고 잘 짜여져 있어서 바깥에서 이를 통째로 부정하고 새로운 학문 체계를 열겠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서양·미국의 정치학 발전이나 세련화의 정도가 너무 커서 이 정도의 독자적 학문화에 대해 회의가 많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 정치학을 주장하면서도 학문 성과의 기준을 서양 학문에다 두고 서양적인 언어를 통해 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학은 미국정치학이 그랬던 것처럼 초보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우리 정치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눈으로 우리 문제를 보는’ 초보적인 시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우리 정치학의 고유한 문제와 시각을 탐구하는 한 예를 국제정치학 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글쓴이가 보기엔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국제정치학을 옮기고 있으 며, 여기에 한국의 경우를 덧붙일 뿐이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한국 문제’에 관한 관심이 일 차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관심이 얼마나 한국적인 ‘시각’의 연구로 결실을 맺었는지는 의문이다. 글쓴이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출발점을 주변부 시각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특수성으로 심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주변부 시각의 전제는 세계정치는 강대국들이 세력 다툼하는 과정에서 약소국을 압박, 침탈 또는 지원한다고 보는 것이다.

글쓴이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립을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첫째, 세계 정치의 보편 영역을 이해하고 기존의 국제정치학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로 우리 정치학이 미국 정치학과 완전히 다른 정치학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 한다. 서양 국제정치학에 없는 획기적인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론을 찾는 것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비현실적이다. 그보다는 주변부·한국의 위치와 문제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관된 세계관과 분석틀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배병삼, “한국 정치학의 기원과 정체성 탐색”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2호(2003), pp.87-105.

이 글은 현재 한국정치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판단 위에서 그 원인과 타개방안을 ‘역사주의적’ 맥락에서 탐색한다. 글쓴이는 학문으로서의 ‘한국정치학’의 기원을 한국의 전통사회(전근대 학문세

계)에서 추적한다. 그 결과 오늘날 대표적인 정치학 분야 과목인 ‘정치사상학’의 기원을 다산 정약용에게서, 또 ‘국제정치학’의 기원을 연암 박지원에게서, ‘비교정치학’의 기원을 혜강 최한기에게서 그 맹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다산에게 현저한 본말론적 사유구조를 전통정치사상의 본질로 받아들이며, 연암에게서는 외국의 발견과 내-외간의 대등한 포치 및 긴장적 사유를 한국 국제정치학의 기원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혜강 최한기에게 현저한 원위(源委), 내외(内外)의 수량적, 계량적 비교 방법론에서 비교정치학의 기원을 확인한다.

글쓴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 정치학이 우리 전통 속에서 정치학의 기원을 애써 찾고 또 부각함으로써, 학문적 식민성을 탈피하고, ‘한국적 정치학’의 신기원을 형성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글쓴이가 보기에 ‘전통을 재창조’하는 작위적 노력과 더불어 ‘정체성’을 추출하는 작업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글쓴이는 한국정치학이 확보해야 할 정체성으로서 ‘덕치’와 ‘경청’의 특성을 추출한다. 전통 정치학은 곧 ‘덕치’로 개념화되는데, 덕치의 한국적 표현이 ‘경청’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경청’의 정체성을 현대 한국정치(학)의 가장 취약점인 ‘사람(정치가) 기르기’ 방법론, 즉 현대 한국정치학의 목표로 도입할 수 있다고 글을 맺고 있다.

강정인, “서구중심주의의 폐해: 학문적 폐해를 중심으로”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아카넷, 2004, pp.391-425.

글쓴이는 이 글에서 서구중심주의가 초래하는 학문적 폐해를 살펴보고 있다. 글쓴이는 서구중심주의가 초래하는 폐해는 학문의 경우에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우려한다. 국내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학·사학·철학 등 기초학문은 물론 여타 인문·사회과학의 내용 역시 지난 1세기 동안 서구학문의 영향에 따라 기본틀이 변형·주조되어 왔기 때문에 ‘서구중심주의로의 매몰’이라는 식민성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구중심주의가 초래한 첫 번째 학문적 폐해는 학문적 문제의식의 서구화이다. 비서구 학자들은 서구의 ‘선진적’ 학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문제의식마저도 우선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내면화하여 그러한 문제에 몰입하게 되며, 그 결과 자기 사회에 대한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자기 사회의 맥락과 유리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폐해는 서구 이론에 따라 한국 현실을 동화시켜 해석하려는 경향이다. 서구중심주의에 따라 비서구 학자들은 서구의 세련된 이론에 몰두하여 그 적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론에 맞지 않는 자기 사회의 현실을 억지로 이론에 동화시켜 애곡되게 해석하거나 자기 사회의 ‘후진적’인 현실이 선진적인 서구 이론의 적용을 받을 만큼 숙성하여 그 이론이 적용되는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폐해는 위의 두 폐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서구사회의 ‘현실’이나 ‘사실’이 주변화되고 적절한 이론화의 계기를 상실하는 것이다. 서구 이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서구적 현실과 사실은 중심적 지위를 갖고 다양한 해석의 대상이 되지만, 비서구사회의 현실과 사실은 단지 서구 이론의 적합성을 일방적으로 검증하는 주변적 지위를 점하게 되어 다양한 해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폐해는 학문의 대외적 종속성과 그에 따라 형성된 학계의 경직된 구조라 할 수 있다. 특히 초강대국 미국과 미국 학문의 영향력을 지대했다. 정치학의 경우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은 연구주제의 선정, 방법론상의 선택, 문헌의 참조에 있어서 전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왔음이 밝혀졌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글쓴이가 보기에도 서구중심주의의 심각성은 비서구인들이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 또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구중심주의가 초래하는 폐해를 ‘폐해’로, 그것도 이론적·실천적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폐해’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KCI